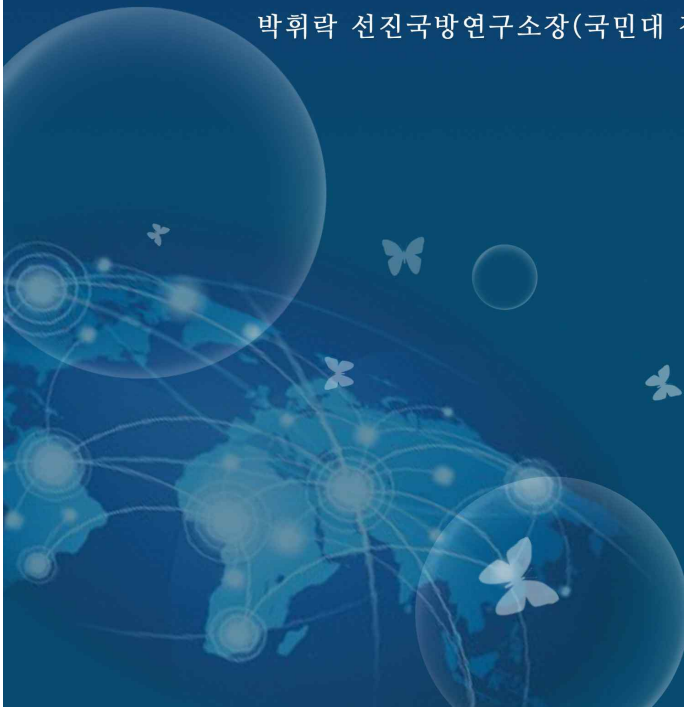


ISSUE & FOCUS

피와 땀, 눈물을 각오해야 재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박휘락 선진국방연구소장(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피와 땀, 눈물을 각오해야 재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박희락 선진국방연구소장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언급한 후 통일 또는 재통일(한국은 1948년 이전에 통일된 국가였기 때문에 통일의 당위성 차원에서 재통일이라는 표현이 적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철권통치를 고려할 때 조만간 북한이 심각하게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재통일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정말 재통일되겠는가?

급변사태를 재통일로 연결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한국에서는 북한에서 어떤 정세변화가 있을 때마다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재통일을 기대하였다. 1994년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한 후 이듬해 극심한 홍수까지 발생하자 주한미군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붕괴(collapse)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한국사회에서도 ‘급변사태(急變事態)’라는 명칭으로 북한이 갑작스럽게 불안해지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후반 김정일의 와병설이 불거졌을 때와 2011년 12월 김정일이 심장병으로 사망하여 현재의 김정은으로 승계되었을 때도 유사한 논의가 반복되었다. 그만큼 재통일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급변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냉정한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재통일로 연결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재통일되는 방향으로 한국이 북한 내부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그다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혼란해질 경우 무엇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한국의 외교적 노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는 어렵고, 경제적 지원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유대가 한국의 주도적 활동을 보장할 수준도 아니다.

북한이 불안정해졌을 때 북한의 내부정세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책은 군대를 보내는 것인데, 이 역시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북한이 한국의 영토로 규정되어 있어 문제시 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별도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국제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개입을 억제하는 것이 급선무다.

오히려 북한의 급변사태 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중국군의 개입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상호우호조약과 국경지역 대량 탈북자 통제를 명분으로 북한지역으로 군대를 투입시키고, 친(親)중국 정권을 수립하여 북한을 안정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중국은 개입 자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채 은밀히 병력을 진주시킬 가능성이 높고, 세계가 이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때는 이미 상당한 중국의 병력이 북한지역을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유엔결의안이 추진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두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기도 했다. 2014년 1월 백두산 부근에서 실시한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훈련이 북한 급변사태 대비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신속대응부대로 지정돼 있는 39집단군, 선양군구의 16집단군과 40집단군 등 약 15만 명의 육군과 공군 제15공정군단 3만 명 등 18만 명이 유사시 북한 지역에 최단기간 내에 투입시킬 수 있고, 그 외 26만 명 이상이 후속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중국이 개입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군대를 북한지역으로 진입시키고 있을 경우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는 결정이다. 한국은 외교채널이나 성명을 통하여 중국군의 개입에 항의하겠지만, 일단 군사적 개입을 시작한 중국이 이러한 항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중국의 변방속국처럼 되어 재통일은 거의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의 헌법에 의하여 북한 지역이 영토의 일부분이라면 당연히 한국군은 중국군의 진입을 격퇴시켜야 한다. 우리의 영토를 침범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북한지역을 재통일하여 한반도라는 민족의 생활영역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신라의 경우처럼 우리는 중국군의 전진을 저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일부 군사력을 중국군의 전진로 상에 신속하게 투입시켜 교전을 유도하면서 중국군의 전진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럼으로써 중국군의 개입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국제여론이 북한에 대한 중국군의 개입을 비판토록 해 중국이 철수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당연히 북한 정부 또는 북한의 정파와 협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남북한

간의 협력을 달성하고, 함께 중국군의 개입을 격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군사적 개입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중국과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고, 한국은 상당한 사상자와 피해를 감수해야할 것이다. 미국은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한국의 자제를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이 개입한다면 한국군이 개입하는 방법 이외에 재통일을 달성할 방법은 없다.

이 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가지도자가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단호하게 내리는 일이다. 국회를 비롯한 국가지도층은 물론 국민들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도자를 신뢰 및 지지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러한 과감한 결정을 내릴 경우, 또는 그것을 확신할 경우 중국은 개입했더라도 철수하거나 평소에 이를 알면 개입 자체를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개성공단 보호 명분의 군사력 투입도 중요하다.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재통일을 더욱 앞당기고자 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군사력을 보낼 수 있어야 하고, 평소에 이를 위한 합당한 명분을 잘 만들어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 보호와 대량 난민의 예방 및 보호가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이 극도로 불안정해졌을 때 개성공단에 위치한 한국인 근로자의 안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성공단은 휴전선으로부터 15km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곳에는 한국인 근로자가 1,000명 정도 상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처의 북한군이나 주민들이 개성공단으로 난입하여 약탈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와중에 우리 국민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무정부상태로 변모할 경우 한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의 군대를 투입하는 것은 자위권 차원의 당연한 조치일 수 있다.

한국이 군대를 투입하여 개성공단 지역의 안정을 일시적으로 확보한 다음 한국인 근로자들을 소개(疏開)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 어려울 경우 그 지역을 일정한 시간 동안 점령해야할 수도 있고, 그러한 점령을 위해서는 주변지역으로 방어진대를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초에는 공중기동작전 등으로 신속대응부대가 투입되겠지만 철수가 여의치 않아서 그들을 보호해야할 경우에는 휴전선으로부터 개성공단으로 연결하는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에 있는 근로자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함과 동시에 진입로 확보를 위한 군사작전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또 그 진입로에 대한 적의 직접적인 공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완충지역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한국은 국제사회에 대하여 개성공단에 존재하는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성공단 보호명분으로 한국군 부대가 북한지역에 진주하고 있을 경우 중국군도 쉽게 개입할 수 없고, 유사시에 우리의 군사력을 평양근처로 이동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정세를 재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량난민의 차단 또는 보호 목적의 군대 투입도 검토하자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내부정세가 심각한 불안정 상황에 빠졌을 경우 당연히 대량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규모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누구도 단정할 수 없지만, 수만 명에서 수백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이 우선적인 목적지가 될 것은 분명하다. 휴전선의 경우 북측이 4, 5종의 철조망이 쳐져 있다는 점에서 탈출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불안정 상황에서 철책이 부분적으로 파괴 또는 철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북한쪽에서 대규모 난민이 휴전선을 통하여 한국으로 탈출하기 시작하였고, 북한의 철책을 월경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난민들이 사상을 당하거나 북한군에 의한 비인도적인 행위가 벌어질 경우 한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관하기는 어렵다. 또한 대량난민이 넘어온다고 하여 무조건 수용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은 휴전선 북쪽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대량 난민 발생 가능성을 북한 개입 명분으로 삼고 있듯이 당연히 한국도 북한 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진입하여 난민 발생을 억제시키거나 북한지역에 수용소를 설치해 구호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북한군에 의하여 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살상당하고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군은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지역부터 휴전선 이북의 일정한 지역까지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난민을 통제 및 수용하며, 그들에게 구호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군의 부분적인 개입은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정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고, 더구나 휴전선 북쪽으로는 일정한 거리 확보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공중기동작전을 통하여 북방한계선 지역을 확보한 다음에 비무장지대를 개통시킨 뒤 되기 때문이다. 제한된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군사력이 소요되지

도 않고, 전방사단별로 1개소 정도의 난민수용소를 설치한다고 할 때 운영이나 통제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최초에 시도한 다음에 상황을 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면 되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작을 수 있다.

당연히 개성공단의 경우처럼 난민보호를 명분으로 한국군이 북한지역에 진주하게 될 경우 중국군의 개입을 억제시킬 수도 있고, 북한의 내부정세를 재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급변사태를 재통일로 연결시키려면 군대를 보내야 한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쉽다. 그것이 재통일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재통일로 연결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이 심각한 불안정사태에 빠졌을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중국군이 개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군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야만 재통일의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중국군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한 즉시 중국군의 전진로 상에 북한군을 보내어 중국군의 전진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북한의 대량난민을 통제 및 보호하기 위하여 북한지역으로 군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일단 군대를 보내두어야 북한의 정세변화를 재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고, 중국군의 개입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한미 양국이 협의 및 합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들의 국익을 계산하여 행동방향을 정할 것이고, 한국의 재통일을 지원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미동맹에 의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보장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재통일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한국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활동을 결정하겠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재통일은 염원이나 희망, 토론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말했듯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한 것이 없이 수백만의 국민들이 사망한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치른 현재의 분단상태를 재통일할 수 있다면, 어찌 아직까지 재통일이 되지 않았겠는가?